

# 2006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팀 <<



## 1 한·미 FTA 협상 추진

한·미 FTA 협상이 지난 2월 3일 공식 선언된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4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금년 내 타결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농경련 등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농업이 입게 될 피해액을 2조원에서 8조원으로 전망하였고 이중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농민들로부터 FTA 반대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양계분야의 경우 만약 현행 20%의 닭고기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이 16.7%가 하락하면서 국내 닭고기 시장에 큰 피해를 예상하였고, 계란에 대해서는 원란의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가공란의 수입은 물론 원란 수입도 싼 가격에 들어올 경우 어느 품목 못지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본회는 정부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닭고기와 계란의 민감품목 지정을 통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제1의 닭고기 생산국이며, 제2의 계란생산국인데, 미국은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 2 양계 의무자조금사업 내년으로



양계자조금은 지난 1992년 본회주관으로 임의자조금이 조성되어 처음 실시된 바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02년 정부로부터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법제화되면서 자조금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미 한우, 양돈, 낙농 등은 수십억의 자조금을 조성하면서 TV광고는 물론 소비촉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의무자조금 사업이 법제화된 이후 양계분야에서도 자조금사업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산란계의 경우 배합사료 거출에 무게를 두어 추진되던 것이 배합사료업체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본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개정안마저 통과되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육계자조금사업은 지난 4월 20일 대의원총회가 실시되어 자조금을 거출기로 확정 하는 등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수순을 밟았지만 대의원회의 의결로 위촉된 관리위원 및 감사의 적법성여부 논란으로 장기간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 지난 4월 20일에 대의원들이 추천한 관리위원이 위법으로 판명되면서 지난 11월 21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안이 다시 부결되면서 내년으로 사업진행이 미뤄졌다.



### 엔로플록사신 검출 파문 등 양계산물 안전성 논란

금년들면서 주기적으로 양계산물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육류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등장하면서 양계업계에 적신호를 가져다주었으며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계란과 닭고기에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10여 년 전에 국내 채란농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퀴놀론 계열의 엔로플록사신이 이제는 내성이 떨어져 약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가격이 1/1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의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모 방송매체에서는 '과자의 공포, 아이들이 위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타면서 제과·제빵에 사용되는 계란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참여연대 및 시민 단체에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실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에 더없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AI 인체감염보호 관련 강력 항의

금년 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체감염 및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AI특별대책반 구성을 서두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내에서 의사AI가 보고되면서 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지난 2월에는 보건복지



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03년과 2004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에 참여했던 인부중 4명이 인체감염이 되었었다는 사실이 거의 2년이 다 된 상태에서 발표됨에 따라 양계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육계인들을 주축으로 한 생산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감행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200여명의 육계인(토종닭 등)이 집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도상훈련 계획 취소는 물론 생산자, 검역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AI관련 협의회가 구성되고, 만약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할 사안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처기로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5 육용원종계 수입 급증으로 2007년 불황예고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지도 아래 업계 자율적으로 유지되어온 9만4천수 원종계 수입 쿼터제가 2005년부터 유명무실해 지면서 금년도 수입량이 큰 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종계 및 닭고기 시장에 적신호가 드리워지고 있다.

금년도 수입물량은 총 12만7천수가 수입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더욱이 원종계사업 신규사업에 뛰어들어 업체도 있어 종계수급은 수요에 비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종계를 기준으로 추정한 잠재력에서도 금년에는 533만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무려 624만수의 종계가 생산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잠재력에 비해 17%나 증가한 수치이며, 종계 적정 사육수수인 500만수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원종계 수입 급증으로 2003년 6월에는 평균 육계산지 가격이 kg당 693원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육계가격이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하면서 육계업계를 괴롭혔다. 이를 방지할 경우 향후 육계수급불안으로 농가와 업계가 모든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6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문제 노출

종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이 종계장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은 지난해부터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전해져 왔으나 본회 조사결과 가금티푸스 백신을 경험한 농가들만 해도 27%에 달했으며, 70%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티푸스 근절을 위해 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줄 정도로 이 문제가 업계에 큰 이슈로 등장하



였다.

본회에서는 위생방역대책위원회 및 종계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금티푸스의 종계 장내 백신접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살모넬라를 근절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 가금티푸스 전파 경로인 백세미에 대한 종계수준의 방역관리, 티푸스에 감염된 종계에 대한 적절한 살처분 보상비 지급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부에서도 생산자들과의 만남을 모색하는가 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살처분 보상비 책정을 준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 7 신란종계·원종계 시여파로 수급 위협

금년 초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확산추세를 보여온 HPAI로 인해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이 잠정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종계수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닭검정사업에도 차질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으로부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원종계와 종계가 수입되면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종계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HPAI로 양계산물 수급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 미국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지만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수출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지난 9월에는 프랑스가, 10월에는 독일산 가금육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종계수입이 정상화 되었지만 항상 주시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8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농가 피해

지난해 말 호남 등 8개 시·도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계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로 장기간의 후유증에 시달린 양계인들이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다시 한번 시름에 잠겼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경남, 경북, 울산, 전남 등 총 18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곳곳의 도로와 제방 등이 무너져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닭들을 굶겨야 하는 상황까지도 초래



하였다. 당시 양계분야에서는 50만수의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가 덜된 지역을 감안하면 피해가 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장에서의 복구비 지원도 금년부터 피해규모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무허가를 제외한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절차도 시군구에서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 재난등급별 금액이 산정되어 곧바로 농가에 입금되는 등 간소화 되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혹서로 인해 닭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입어 생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9 식품안전처 설치 부각, 식품업무 농림부 일원화 주장

식품안전처 설치를 놓고 축산업계는 물론 농업 전체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 초 현 식약청을 해체하고 약품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환원하며 식품업무는 신설조직과 합쳐서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사육과 생산은 농림부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왜 식품안전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굳이 총리실에 이 기구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업무를 농림부에서 일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체계가 비슷한 곳은 미국과 일본으로써 큰 무리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실정을 피력하면서 농림부에서의 식품업무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산하에 HACCP 기준원을 설치하는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2008년부터 양계농가 분야에서 HACCP 자율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이번 문제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0 계열업체 가격 담합행위 공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계육협회와 H사를 비롯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4개월간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27억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개 업체 중 담합을 주도한 4개사에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닭고기 가격 인상을 방조하고 시세를 고시한 한국계육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사장단회의를 비롯 각종 사모임을 통해 생닭 가공용품을 kg당 201원(21%)가량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했으며, 이후 전 계열사들이 참여하면서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계열업체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이외의 가격과 물량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계육협회는 시장에 거래되는 도계육 및 삼계의 가격과 거래물량 이외의 가격·물량에 대한 정보를 게재·고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계**